

한국의 민주화: 일반 대중의 인지

崔 明* · 申道澈*

-----〈목 차〉-----	
I. 머리말	IV.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개념
II.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기존 연구	V. 측정
III.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서 일 반 대중	VI. 주요 발견들
	VII. 맷음말

안정된 민주정치의 미래는 민주정부 아래에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시민의 책임과 가능성에 달려 있다(Juan Linz, 1990).

I. 머리말

한국은 1987년 6월 29일의 소위 6·29 선언 이후 공식적으로 민주적 전환기에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5년 사이에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포함하여 여섯 차례의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가 실시되었다. 더구나 그 기간 동안에는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헌법적인 방법에 의하여는 처음으로 두 개의 정권이 연속하여 창출되었다. 서방의 언론 매체들은 이러한 변화를 “자랑스러운 성취인 동시에 아시아 다른 지역에 대한 모범”이라고 칭찬하였고(*New York Times*, December 28, 1992, p.A10), “민주주의 문화의 수립을 향한 거보”이며, “유교적 사회는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관념”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좋은 예라고 하였다(*Wall Street Journal*, December 22, 1992, p.A12).

한국은 과거에 주로 경제적 기적의 나라라든가, 혹은 1988년 올림픽을 성

*서울대학교 교수, 정치학.

**미국 Sangamon State University 교수, 정치학.

공적으로 개최한 나라로 서방 세계에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화가 진행되는 나라도 알려지게 되었다. 1992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그 5년 전의 선거와는 달리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실시되었고, 30년 만에 문민 대통령을 탄생시킨 역사적 선거였다. 투·개표나 컴퓨터의 부정도 문제화되지 않았으며, 2위로 낙선한 후보는 자신의 패배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민주화의 길을 새로운 세대에게 넘기기 위하여 정계의 은퇴를 선언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민주주의가 한국에서도 정착하는 신호임을 알리는 것이다. 즉 한국의 민주화는 “유교적 문화가 권위주의적 지배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헌팅تون(Huntington, 1991)의 주장을 부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브라질이나 기타 많은 신생 민주국가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과거의 관료적 권위주의 정권의 제도적 잔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제한적 민주주의(limited democracy)이다. 예컨대, 199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일부 지역에서 야당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는가 하면,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전현직의 고위 정부 관리들이 집권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음모를 자행한 것이 탄로나기도 했다(*New York Times*, December 14, 1992, pp. A1 & A7; Shim, 1993: 21).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정착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민주주의는 “과연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적 이념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두 가지 연구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목적은 한국의 시민들이 서방의 언론 매체가 보도하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로의 진행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일반 시민의 문화적 성향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열망과 지지가 그 실현에 필수적이라는 기본 가설에서 출발한다(Dalton, 1988: 229; Inglehart, 1990: 24; Tarrow, 1992).

Ⅱ. 민주주의 정착(Democratic Consolidation)에 대한 기존 연구

민주화에 대해서는 특히 지난 십 수 년 동안 많은 양의 이론적·경험적 연구가 행해졌다.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성공적인 민주화의 길을 걸음에 따라, 정치학을 위시한 기타 사회과학의 연구자들은 민주화의 동태에 관하여 보다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연구의 상당 부

분은 민주주의의 등장에 다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문화적 가치, 경제적 조건 및 계급구조를 가진 동유럽의 일부 국가와 기타 지역에서 왜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에 주로 집중되었다.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지배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정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본질적 주안점이 무엇이든 간에, 기존 연구들은 정치 지도자 혹은 전략적 엘리트들(strategic elites)이 민주화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오도넬 등이 편집한 네 권으로 된 민주주의 이행에 관한 연구(O'Donell, Schmitter, and Whitehead, 1986)는 권위주의적 지배로부터 성공적으로 탈피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로서 엘리트 상호간의 선택과 전략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 라틴 아메리카와 남부 유럽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정착에 관한 히글리와 건서의 연구(Higley and Gunther, 1992: 323)도 “정권 안정성의 존재, 평화적이거나 파괴적인 대중동원과 참여에 비하여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보다 중요한” 변수로서 정치적 엘리트의 역할을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는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서 엘리트의 선택과 재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많은 연구들도 예컨대 콜리어와 노던의 연구(Collier and Norden, 1992)와 같이 민주화는 정치적 엘리트의 재능, 가치, 선택 및 전략에 달렸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민주화의 유사한 측면을 강조한다. 민주화의 물결에 관한 연구에서, 헌팅تون(Huntington, 1991: 36)도 정치적 엘리트를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설명의 변수”로 보고 있다. 디 팔마(Di Palma, 1989)도 핵심적인 정치지도자들로 하여금 절차적인 규칙에 대한 약속에 동의하게 한다면, 민주주의는 불리한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셰보르스키(Przeworski, 1991)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보다 민주적인 조건 아래서 자신들의 이익이 보호된다는 확신이 엘리트 집단 내부에 있기만 한다면 민주화는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분명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엘리트들은 일반 시민이 갖고 있지 않은 지식, 권력 혹은 재능의 수준에 따라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와 그 절차적 규범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엘리트와 일반 대중의 심리적인 의무감이 민주주의의 등장에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도 위의 연구들에서 알 수 있다. 사실 수십년 동안 권위주의적 정치에 시달려 온 나라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기억하거나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흔히 믿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적 규범과 제도는 더욱 말할 것이 못된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민주적 정

치문화가 민주화의 필수요건으로 작용할 수 없는 일이다(Schmitter, 1991: 3). 일반 대중이 민주적 정치문화를 갖기 전에 민주화의 길을 걷는 나라들도 많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헌팅تون(Huntington, 1991: 36)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전될 수 있다. 또 그것은 사회의 권력계층의 누구도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비용이 그들을 수용하는 비용보다 비싸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물론 등장할 수 있다(Dahl, 1971: 15-16). 권위주의적 지배층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분쟁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비록 아무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주주의는 정치적 갈등해소를 위한 “차선책”(a second-best solution)으로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O'Donnell and Schmitter, 1986: 38). 이러한 상황 아래서 민주주의는 지배 엘리트 사이의 정치적인 경쟁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지배 엘리트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로 전락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민주주의에 언질을 주지 않던 일부 지배 엘리트들도 오랜 기간 동안 민주정치의 성공적인 실천에 물들다가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자로 변신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민주화의 동태에 관한 대부분의 최근 연구들은 이와 같이 정치적 엘리트들의 전략적인 동기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자연히 문화적 가치와 정향이 민주화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그 과정에서 일반 대중이 수행하는 역할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이아몬드(Diamond, 1992b)와 메인웨어링(Mainwaring, 1992)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의 민주화 물결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어떤 정치체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완전한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까워지는지 혹은 멀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III.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서 일반 대중

민주화는 비민주적 지배로부터 민주주의로 향한 움직임이다. 그것은 분석적으로는 구별되나 경험적으로는 중복되는 여러 개의 복잡한 역사적 단계를 포함한다. 인과적 순서라는 논리에서 보면, 그것은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 정권의 퇴화와 붕괴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의 등장을 거쳐서 민주주의 정권의 정착에 이르는 단계로서 나타난다(Karl and Schmitter, 1993: 22-

26: O'Donnell and Schmitter, 1986: 8-9). 그러나 실제로 민주화 과정이 반드시 첫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이아몬드가 말한 바와 같이(Diamond, 1992c), 어떤 민주주의는 탄생과 동시에 사멸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그 정착에 실패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민주화는 단선적인 방식으로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때때로 일련의 위기와 반전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것이 항상 완전한 혹은 안정된 민주주의를 가져오지는 않는다(Karl and Schmitter, 1993).

민주화의 세 단계 가운데, 마지막의 정착 단계가 가장 이룩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Mainwaring, O'Donnell, and Valenzuela, 1992: 5). 그것은 권위주의로의 반전과 민주주의의 좌절이 가장 잘 나타나는 단계이기도 한 것이다. 정착 단계는 권위주의적 지배자의 몰락과 새로운 민주 정권의 성공적인 수립을 일반 시민들이 환호하는, 소위 “이행기”(transition period)의 뒤를 바로 이어 나타난다. 성공과 환희라는 주관적인 느낌이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까닭에, 그들은 심리적으로 ‘디센кан토’(descencanto)의 감정, 즉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감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정착이라는 셋째 단계는 처음 두 단계보다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된다. 첫 두 단계에서의 과제는 권위주의적 지배의 전복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민주 헌법의 제정과 같은 비교적 알기 쉽고 단순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임에 반하여, 마지막 국면은 분명하게 “꼭 이것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예컨대, 경제적 위기, ‘잘못 설치된’ 기구, 정치적 부패, 권위주의적 공포정치 아래서 희생된 자들의 문제 등의 도전을 받게 된다(Ackerman, 1993; Valenzuela, 1992). 또 그 국면은 새로운 정권으로부터 그들의 ‘떡’을 지키겠다고 하는 경험없는 신진 내지는 뜻내기 정치가들이 저지르는 각종의 넌센스의 도전을 받게 된다(Whitehead, 1989: 79).

다른 국면과 비교할 때, 정착의 국면은 보다 많은 수의 정치적 행위자들의 요구로 충만된다. 또 그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하는 숙제의 국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 전의 국면과는 달리, 거기에는 “피상적”이거나, 혹은 “편의상”으로 민주주의를 해보겠다고 작정했던 엘리트들에 의해 서만 이룩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민주주의 정권이 정착되기 위하여는 일반 공중이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수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Sorensen, 1993: 41). 다시 말하면, “사다리의 위와 아래 모두에 민주주의자(democrats)가 없이는 안정된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Hermet, 1991: 250).

일반 시민이 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를 믿게 되고 또 그것이 그 사회의 “유일한 게임”이라고 생각할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는 몇 가지의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Mainwaring, 1992: 309-312). 일반 대중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민주주의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반민주 운동의 호소에 현혹될 수도 있으며, 혹은 특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는 새로이 수립된 민주 정권의 전복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상황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권위주의에로의 복귀를 위한 어떤 움직임에도 적극 반대할 것이다(Inglehart, 1990: 24). 그렇다면 일반 대중이 민주주의를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때에만, 그들의 정권이 경제적 위기나 기타 정치적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견제를 받게 되고, 따라서 피지배자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대중 민주주의자들은 특히 이행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민주적 권리와 기회가 확대되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민주주의가 보다 완전한 이상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관건이 된다.

역사가 길던 짧던 모든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제도상의 개혁 내지는 쇄신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새롭게 분출하는 공중의 요구와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특히 권위주의 지배의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과 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공중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 이들 나라의 많은 중요한 제도들은 공중에 봉사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도 아니고, 더구나 그것들이 공중의 심사를 거친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로 이전된 후에도 이들 제도들은 권위주의적 지배의 오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패와 탄압과 같은 권위주의적 관행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행적인 제도를 제지하고 동시에 민주적 신뢰 의식을 좀먹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민주주의는 오직 “효율적이고 동원된 시민의 도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Diamond, 1992b: 37).

IV.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개념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개념은 흔히 안정 혹은 제도화의 개념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 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정착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

실이다(Valenzuela, 1992: 59; Higley and Gunther, 1992: 7). ‘정착’과 ‘안정’은 비록 ‘안정’이 ‘정착’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현상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안정’은 민주적 정권의 장기적인 존속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착’은 그 업적 수행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를 가리킨다. 아르헨티나와 보츠와나에 경험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정권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특별한 그리고 편견에 호소하는 (ad hoc and ad hominem)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무한정하게 존속될 수 있다(Karl and Schmitter, 1993: 23). 혹은 민주주의 정권이 군부와 같은 권력의 비민주적 원천(sources)에 도전하기를 거부하거나, 몇몇 소집단 등을 정치과정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지속될 수도 있다(Hermet, 1991: 256). 요컨대, 정착된 민주주의는 시간의 흐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안정성의 표지인 것이다.

그러면 민주주의 정권을 정착시키는 요인들은 무엇들인가? 민주적 이행의 기간이 끝나고 정착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존 문헌에 따르면, 이행기가 종식한 다음에 오는 정착기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정부가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 정착의 국면이 끝난다거나 혹은 언제 정착이 그 과정을 마무리지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아직 정설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 연구에는 “어떻게 정착을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민주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정의는 폭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가장 넓은 의미의 정의는 야당에게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연구자로 하여금 정착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예컨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정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히글리와 건서(Higley and Gunther, 1992)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은 절차에 대한 엘리트들의 합의가 선거와 기타의 제도적인 과정에 대한 대중의 광범한 참여와 접합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린쯔(Linz, 1990: 158)에 의하면, 정착된 민주주의란 “주요 정치 지도자, 정당, 조직된 이익이나 제도가 아무도 권력획득을 위한 민주적인 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또 어떤 정치 기구나 집단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책결정자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권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때”의 민주주의라고 하였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그 나라가 권위주의적 선동가들에 의한 주술에서 해방되고,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대안을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다른 어떤 정권을 상상하기 어려울 때” 정착된다는 것이다(Hermet,

1991: 257).

여기서 아래와 같은 전략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즉, 민주주의의 정착은 새로운 민주적 정권이 하는 일을 제약하는 공식·비공식의 기구, 절차, 또는 관행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착은 엘리트나 대중을 막론하고 “편의상” 혹은 “피상적”인 민주주의자를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신봉자로 바꾸어 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굳은 약속이야말로 “효율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창조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과히 뛰어나지 않은 정책이 수행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정당성을 진작시킨다”는 것이다(Mainwaring, 1992: 313).

발렌주엘라(Valenzuela, 1992: 70)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정착은 공정하게 선출된 행정부의 관리와 입법부의 의원들의 권위가 정당하게 수립되고(제한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 중요한 정치행위자는 물론 일반 대중도 대체로 그들의 민주 정권이 예측가능한 미래까지 지속되리라고 기대할 때 종지된다. 그리하여 오도넬(O'Donell, 1992)은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은 흔히 그 이행국면을 촉진시켰던 합의와 약속의 포기 내지는 변경을 필요로 하지만, 민주적 기회에 대한 가일층의 확대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것은 또 다이아몬드(Diamond, 1992a)가 민주적 정치문화의 발전이 야말로 민주주의의 정착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한 이유인 것이다. 또 이것은 그 정착의 국면이 끝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십년 혹은 수 세대가 걸리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V. 측정(measurement)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정착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 가운데, 이 연구는 심리적인 차원을 주로 다룬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에 있어서 민주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정향을 평가한다. 심리적 차원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효율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창조하는 기타의 제도적 차원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한국의 일반 대중의 정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짹의 질문을 하였다. 첫째의 짹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해 온 지난 5년 동안에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이 짹의 하나는 민주적 발전의 양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대한 만족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2

에서 +2에 분포하는 민주적 성취의 5점 지수로 환원시켰다. 그것들은 또한 ① 퇴보적(regressive), ② 현상유지(status quo), ③ 불만족스러운 진보(unsatisfactory progress), ④ 만족스러운 진보(satisfactory progress)라는 네 개의 민주적 성취 유형(type)과 결합시켰다.

둘째의 짹은 “민주화에 대한 심리적인 약속”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첫번째의 것은 응답자가 자신의 나라에 바라는 민주화의 수준을 알기 위한 것이고, 그 두번째의 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민주화의 범위를 알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10개의 범주를 가진 이들 두 척도에 대한 응답은 합쳐져서, 다시 낮은 쪽(-2)에서 높은 쪽(+2)에 이르는 5점 지수로 표시했다. 이 지수에서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민주화에 대하여 강력한 심리적 약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온건하게 약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민주화에 대하여 심리적인 약속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VII. 주요 발견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기초 자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1991년 11월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 인구를 대표하는 1,187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개별적인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것이다.

1. 민주화에 대한 심리적 약속

한국인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또 지난 30여년 동안 그들 생활을 지배해 온 권위주의 정치에서 탈피하려는 운동에 심리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조사에서는 두 개의 질문을 포함시켰다. 첫째의 질문은 그들이 원하는 민주화의 수준을 10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한 것이고, 둘째의 것은 권위주의적 지배로부터의 민주적 변환을 그들이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범위를 표시하도록 요구한 것이었다. <표 1>은 이 두 질문에 대한 반응이다.

민주화의 선호 수준에 관한 질문을 보면, 모든 응답자들이 민주주의를 권위주의적 지배에 대한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5명 가운데 거의 2명(40%)은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체제라는 일반적인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비민주주의자 가운데는 3분의 2(26%)가 혼합형의 정치체제 아래서 살기를 원하고, 나머지(13%)는 차라리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적 지배를 선택하고 있다. 5명 가운데 3명(60%)은

〈표 1〉 민주주의에 대한 심리적 약속의 수준

차 원	척도 점수					평균
	-2	-1	0	1	2	
선호(바램)	1.6%	11.9%	26.2%	42.5%	17.8%	0.6
지 지	2.9	7.9	24.6	29.0	35.6	0.8
전반적인 약속	3.0	7.3	19.9	25.4	44.3	1.0

권위주의적 지배보다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실질적인 다수는 민주주의자라고 할 것이며, 민주주의자는 수적으로 권위주의자의 5배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자 가운데 상당한 다수(43%)가 그들의 정치체계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부분적으로 민주화된 정치체계 아래서 살기를 원한다. 완전히 민주화된 체제 아래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5분의 1이 채 못된다(18%).

〈표 1〉을 다시 보자. 민주화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성인 인구의 약 3분의 2(65%)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전체 성인 인구 가운데 민주주의자의 비율을 약간 상회한다. 민주화의 지지자를 보면, 36%의 다수자는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 29%의 소수자는 중간 정도의 지지를 하고 있다. 민주화를 반대하는 자들은 거의 권위주의적 정권을 찬성하는 수 만큼 된다. 그 반대자 가운데 8%는 중간 정도의 반대자이고, 3%는 강력한 반대자들인 것이다. 민주화에 대한 이들 강력한 반대자들은 강력한 지지자에 비하면 12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표 1〉의 맨 아래 난을 보자. 민주화에 대한 전반적인 약속의 수준이 바램과 지지 양자를 고려함으로써 측정되어 있다. 전체의 약 3분의 1(30%)이 약속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머지 3분의 2 가운데 상당한 다수자는 완전한 약속을 하고 있고, 이들은 민주화를 바랄 뿐 아니라 지지하고 있다. 그들의 수는 부분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거의 두 배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약속하고 있는 민주주의자는 과반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전체 인구의 단순 다수(44%)는 된다.

그러면 누가 완전히 약속한 민주주의자인가? 〈표 2〉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당히 큰 비율로(49% 대 39%) 완전히 약속한 민주주의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노인층보다는 젊은층 가운데 완전히 약속한 민주주의자가 많다. 20대 이하의 젊은 사람 중에는 약 반 이상(51%)이 민주화에 대하여 완전한 약속을 하고 있는 반면에, 60대 이상의 사람들을 보면 그 비율은 5명 중에 2명이 채 못된다(38%). 또 대학 교육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표 2〉 인구학적 특성과 민주화에 대한 약속

인구학적 특성	약속 유형			사례수
	비약속	부분적인 약속	완전한 약속	
성*				
남성	28.1%	22.7%	49.2%	406
여성	32.5	28.3	39.1	575
연령*				
18~29세	26.6	22.3	51.1	376
30~39세	30.7	25.9	43.4	348
40~49세	34.5	27.6	37.9	232
50~59세	32.1	25.8	42.1	159
60세 이상	29.7	32.8	37.5	64
학력*				
국민학교	31.2	28.3	40.6	138
중학교	30.2	30.8	39.0	182
고등학교	31.8	26.7	41.5	453
초급대학	31.4	25.4	43.2	118
대학교	26.8	18.8	54.4	287
소득				
60만원 이하	31.0	27.3	41.7	242
60~80만원	32.3	27.6	40.1	192
80~100만원	34.6	21.8	43.6	257
100~150만원	29.5	27.6	42.9	261
150만원 이상	21.4	23.3	55.2	210
지역규모				
대도시	31.0	24.6	44.5	562
중소도시	31.8	26.5	41.7	302
농촌	27.6	26.0	46.3	315
행정구역*				
서울	30.0	26.8	43.2	287
강원·경기	27.3	26.1	46.5	245
충청	28.1	29.7	42.2	128
전라	24.6	22.8	52.7	167
경상	36.1	23.6	40.3	352

*p<0.05

자들을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10%나 많이 민주화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부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부유한 계층과 가장 부유하지 못한 계층 사이에도 위와 비슷하게 10% 이상의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나 거주 지역규모별로는 민주화에 대한 약속에 관한 한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표 2>의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지역간의 차이이다. 남한의 5개 지역 가운데, 전라도 지역이 나머지 지역보다 의미있는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은 주민의 과반수(53%)가 완전하게 약속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것은 또 민주화에 대한 비약속의 인구가 주민의 4분의 1 정도 밖에 많되는 유일한 지역인 것이다. 특히 전라도는 민주화에 대하여 완전한 약속자의 수가 비약속자의 두배가 넘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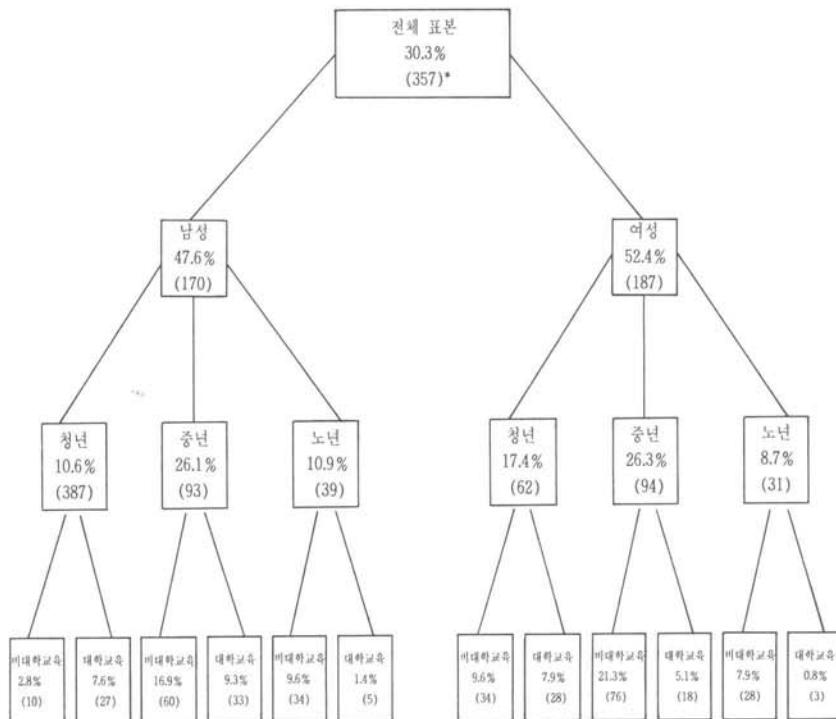
<표 2>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약속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상도에서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다섯 지역 가운데, 경상도는 3분의 1이 넘는 주민(36%)이 비약속자인 유일한 지역이다. 또 이 지역은 비약속자의 비율이 완전한 약속자의 비율과 거의 비슷한 유일한 지역이다. 다만 그 차이는 후자가 4% 많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라도의 경우에 그 차이란 28%이며, 그것은 경상도에 비하여 7배나 된다. 이 수자로 미루어 보건대, 전라도는 민주주의자의 보루이며, 경상도는 권위주의자들의 아성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우리는 민주화에 대한 비약속자들이 집중된 특정 인구 집단을 3개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성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 비약속자가 남성 비약속자보다 약간 많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남녀 모두 중년층이 우세하다. 교육을 고려할 때, 민주화에 대한 비약속자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중년 여성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집단은 전체 비약속자 인구의 5분의 1을 약간 넘는다(21%). 이 다음에 오는 집단이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중년의 남성층이며, 이들은 전체의 17%를 이루고 있다. 요컨대,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중년층이 한국에서는 민주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층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주화에 대한 인식

과연 한국은 그 권위주의적 정권의 민주화에 있어서 서양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와 같은 팔목한 발전을 이루한 것인가? <표 3>의 자료는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6·29 이후에 출범한 정권 아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범위를 평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5명 가운데 2명(39%)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제5공화국과 별로 다르지 않은 정치체제 아래서 산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가운데도, 13%라는 아주 적은 소수자만이 제6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공화국이 한국의 민주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을 뿐이다. 한편 10명 중 거의 1명(9%)은 제6공화국의 민주화 기여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전의 정

<그림 1> 인구학적 특성으로 본 민주화에 대한 비약속자의 분포



*괄호 안의 수치는 사례수입니다.

<표 3> 민주화에 대한 경험

차 원	척도 점수					평균	사례수
	-2	-1	0	1	2		
진 보	1.6%	6.4%	30.7%	48.2%	12.9%	0.6	1183
만 족	13.3	29.6	37.4	16.9	2.7	-0.3	1183
전반적 평가	5.1	17.7	34.1	28.0	15.0	0.3	1181

권에 비하여 제6공화국은 더 권위주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매우 특기할 사실이다.

민주적 개혁의 크기 이외에, 그러한 개혁의 질을 평가하여 10점 만족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응답은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압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5분의 2가 넘는 응답자(43%)는 그러한 개혁에 불만을 표시했고, 다시 3분의 1이 넘는 응답자(37%)는 “만족하지도

않고 불만이지도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지 그들의 5분의 1(20%)만이 개혁들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이 긍정적 응답보다 부정적 응답이 많은 개혁의 질에 대한 만족도의 평가는 개혁의 범위 혹은 발전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큰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응답의 이러한 두가지 패턴을 함께 고려한다면, 한국의 민주화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예컨대, 5명 가운데 3명(61%)은 권위주의적 정치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진보가 있었음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5명 가운데 1명(20%)만이 민주적으로 개혁된 제도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의미는 적어도 한국인의 5분의 2는 새로운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9명 가운데 4명을 약간 상회하는 한국인들(46%)은 제6공화국이 이룩한 민주적 개혁의 크기에 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그러한 개혁의 질에 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표 4>는 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인지와 연관된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것이다. 6개의 변수 가운데서, 그러한 인지와 유의미하게 연관된 변수는 연령이다. 기대하였던 바와 같이, 권위주의적 정치를 개혁하기 위하여 당시에 진행 중이던 노력에 대하여 가장 비판적인 층은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출현을 가장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층이고, 그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기를 가장 꺼리는 층이다. 그들의 거의 과반수(46%)는 제6공화국의 출범이 한국에 있어서 민주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보지 않는다. 또 거의 비슷한 수의 젊은 층(45%)은 제6공화국의 민주화 개혁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믿지 않고 있다. 10명 가운데 겨우 1명(9%)만이 제6공화국은 만족스럽게 기능하는 민주주의로 그 정치체제를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생각할 때 름이다. 이것이 민주화에 관하여 20대의 젊은 층이 갖고 있는 태도인 것이다.

<표 4>의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역시 지역적인 차이이다. 민주화에 대한 평가에서와 마찬가자로, 다섯 지역의 주민들은 제6공화국 아래서 수행된 민주적 개혁에 대한 인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위시하여 강원·경기, 충청과 경상 지역에서는 60% 혹은 그 이상의 큰 과반수의 인구가 민주화에 있어서 진보를 인지하고 있으나, 전라도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진보를 인지하고 있는 인구가 48%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지역의 주민 가운데는 거의 6명중 1명(16%)은 동일한 기간내에 한국이 보다 권위주의적으로 되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지역의 거의 2배가 된다. 전라도는 민주화의 퇴보를 경험했다는 사람이 만족스러운 진보를

〈표 4〉 인구학적 특성과 민주주의 경험

인구학적 특성	민주주의 경험의 유형				사례수
	퇴보	현상유지	불만족스러운 만족	만족스러운 만족	
성					
남성	8.1%	27.8%	47.6%	16.5%	605
여성	8.0	33.9	44.8	13.3	578
연령*					
18~29세	9.6	35.9	45.2	9.3	376
30~39세	9.7	29.8	47.6	12.9	349
40~49세	6.4	26.6	47.2	19.8	233
50~59세	6.2	26.3	48.1	21.9	160
60세 이상	6.2	32.3	36.9	24.6	65
학력					
국민학교	9.2	35.5	36.9	18.4	141
중학교	7.7	31.1	47.0	14.2	183
고등학교	6.9	27.3	50.3	15.5	451
초급대학	5.8	30.9	45.8	17.6	118
대학교	10.5	33.4	44.3	11.8	287
소득					
60만원 이하	10.2	33.7	41.5	14.6	246
60~80만원	7.8	32.8	43.2	16.1	192
80~100만원	6.6	29.2	49.8	14.4	257
100~150만원	6.9	29.9	48.7	14.6	261
150만원 이상	8.1	27.6	47.6	16.7	210
지역규모					
대도시	8.3	28.2	49.1	14.4	564
중소도시	8.0	33.2	41.9	16.9	301
농촌	7.5	33.0	45.3	14.2	318
행정구역*					
서울	8.7	27.2	48.1	16.0	287
강원·경기	7.8	31.0	46.5	14.7	245
충청	3.9	29.7	50.8	15.6	128
전라	16.2	35.3	40.1	8.4	167
경상	5.3	31.7	45.8	17.1	352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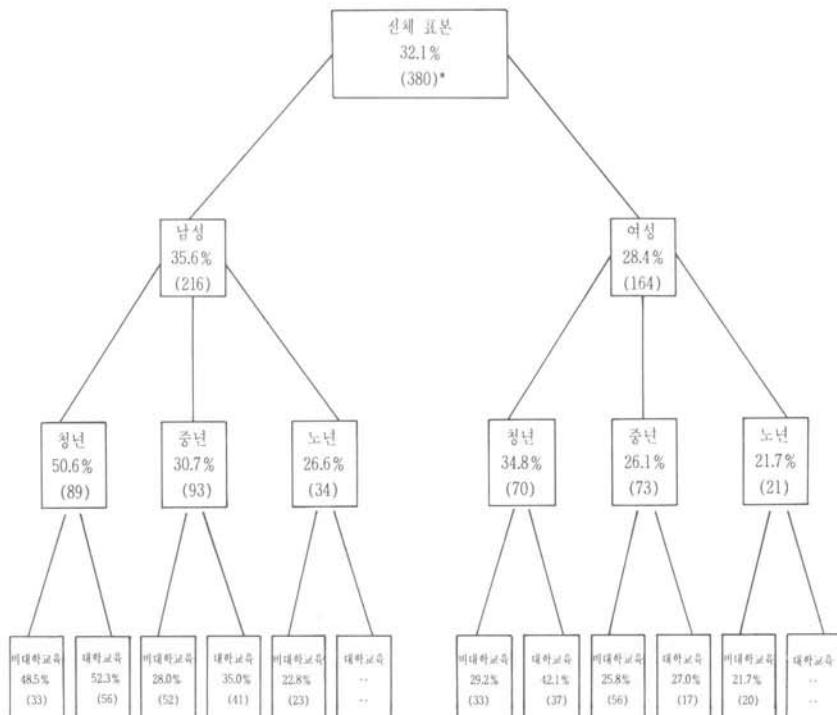
경험했다는 사람보다 2대 1의 차이로 많은 유일한 지역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히려 후자가 비슷한 차이로 전자를 누르고 있다.

〈표 4〉의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민주적 진보에 대하여 불만족인 사람이

민주적 경험의 다른 유형(type)—만족스러운 진보, 현상 유지, 퇴보—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이다. <표 4>에 제시된 20개의 인구학적 변수의 범주 모두에서 민주적 진보에 대하여 불만족인 사람이 과반수를 넘거나, 그에 가까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그 정확한 비율은 최저 37%에서 최고 51% 사이에 있지만, 그들은 압도적인 다수자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화에 대한 불만족의 느낌이 한국의 어떤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국의 모든 집단에 만연된 느낌인 것이다. 성, 과거의 정치적 경험, 사회경제적 지위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한국인은 소위 제6공화국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민주적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림 2>는 민주적 진보에 대하여 불만족인 사람들 특별 집단을 성, 연령 및 교육배경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집단은 민주화에 대하여 완전한 약속은 하고 있으나, 지난 4년동안 성취된 진보에 대하여는 불만족한 사람들

<그림 2> 제6공화국에 실망한 약속하고 있는 민주주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괄호 안의 수치는 사례수임.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실망한 민주주의자라고 할 때, 그들은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32%)에 육박한다. 이들 가운데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젊은 민주주의자가 나이 많은 민주주의자에 비하여 훨씬 제6공화국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있다. 각 연령 집단 가운데서는 대학교육을 받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더욱 실망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태우 정권에 가장 실망하고 있는 집단은 대학교육을 받은 젊은 남성집단이다. 그 다음은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 남성 집단이고, 다시 그 다음은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 집단으로 이어 진다. 민주정치에 완전히 약속한 한국인 가운데,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노인 집단이 제6공화국의 민주적 성취에 대하여 가장 적은 실망을 보이고 있다. 이 집단에 비하면, 대학교육을 받은 젊은 층의 실망률은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52% 대 23%).

VII. 맺음말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정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쉽사리 실현될 수 없다. 그렇다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그들 사이에 민주주의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 대중의 정치적 태도와 신념은 점차로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일반 대중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제 얼마되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를 전망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위에서 제시되었지만, 한국의 민주화에 관하여는 세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첫째, 조사 당시까지 진행된 5년간의 민주적 개혁은 사실상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치를 민주적 정치로 변환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만 대중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한적인”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둘째, 민주적 개혁은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사된 대중의 과반수는 아직도 민주주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약속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발견에 의거하면,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정착은 요원한 일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조사는 한국인이 민주화의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갈등의 기본적인 원천들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사실이다. 이것들은 흔히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통제하는 사회경제적 자원, 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화된 정치생활의 종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는 이것들 가운데 지역이 가장 중요한 갈등 원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위주의적 정치를 민주주의적 정치로 변환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의 태도와 신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지역인 것이다. 계급이나 정치적 세대와 같은 변수는 한국이 당면한 정치적 갈등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역감정의 순화야 말로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정착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 Ackerman, Bruce
 1991 *The Future of American Liberal Revolu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ollier, David, and Deborah Norden
 1992 "Strategic Choice Model of Political Change in Latin America." *Comparative Politics* 24 (January): 229-234.
- Dalton, Russell J.
 1988 *Citizen Politics in Western Europe*. Chatham, NJ: Chatam House.
- Diamond, Larry
 1992a "Introduction to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Mimeo.
 1992b "Conclusion to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Mimeo.
 1992c "The Globalization of Democracy: Trends, Types, Causes, and Prospects." In Robert Slater *et al.*, *Global Transformation and the Third World*. Boulder: Lynne Rienner.
- Hermet, Guy
 1991 "Introduction: the Age of Democrac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28 (May): 249-257.
- Higley, John, and Richard Gunther (eds.)
 1992 *Elite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Latin America and Southern Europ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s i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rl, Terry Lynn, and Philippe C. Schmitter
 1993 "Democratization Around the Globe: The Opportunities and Risk." In Michael T. Klare, and Dan Thomas (eds.), *World Security Trends and Challenges at Century's End*. New York: St. Martin Press.

- Johnson, Chalmers
1993 "Where's Clinton and Asia." *New York Times* (February 8, 1993).
- Linz, Juan
1990 "Transitions to Democracy." *Washington Quarterly* 13 (Summer): 143-162.
- Mainwaring, Scott
1992 "Transitions to Democrac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Issues." In Mainwaring, O'Donnell, and Valenzuela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pp.295-302.
- Mainwaring, Scott, Guillermo O'Donnell, and J. Samuel Valenzuela (eds.)
1992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University Press.
- New York Times*
1992 "Winning Ways in South Korea." *New York Times* (December 28), p.A10.
- O'Donnell, Guillermo
1988 "Challenges to Democratization in Brazil." *World Policy Journal* 5 (Spring): 281-300.
1992 "Transitions, Continuities, and Paradoxes." In Mainwaring, O'Donnell, and Valenzuela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pp.17-56.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Schmitter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O'Donnell, Guillermo,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eds.)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4 vol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1992 *Democracy and the Marke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itter, Philippe C.
1991 "Public Opinion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in Portugal." Mimeo.
- Shim, Jae Hoon
1993 "Civilian Mandate, Radicals Lose out in Presidential Pol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56 (January 7, 1993).
- Sorensen, Georg
1993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Boulder: Westview Press.
- Tarrow, Sidney
1992 "Mass Mobilization in Transitions to Democracy: Two Applications in Southern Europe." Presented to the Subcommittee on the Democratization of Southern Europe of the SSRC/ACLS Joint Committee on Western Europe in Delphi, Greece in July, 1992.
- Valenzuela, J. Samuel
1992 "Democratic Consolidation in Post-Transitional Settings: Notion, Process, and Facilitating Conditions." In Mainwaring, O'Donnell, and Valenzuela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pp.57-105.

Wall Street Journal

- 1992 "Democracy Wins One."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22, 1992), p.A12.
Whitehead, Laurence
1989 "The Consolidation of Fragile Democracies: A discussion with Illustrations." In Robert A. Pastor (ed.), *Democracy in the Americas: Stopping the Pendulum*. New York: Holmes and Meier.